

##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방침과 구체적 시책

북조선(북한)에 의한 납치문제는 일본의 주권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며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긴박한 중요 과제이다.

정부는 납치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조선(북한)과의 국교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, 납치피해자로의 인정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납치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즉시 귀국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. 또한 납치에 관한 진상규명, 납치실행범의 인도를 계속적으로 추구해 갈 것이다.

상기 방침 아래, 각 각료는 본부장, 부분부장을 중심으로 연계를 긴밀히 하고 아래 8개 항목에 대해 각각의 책임 분야에 있어 전력을 다할 것이다.

- ① 조기 해결을 위한 북조선(북한)측의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대응 조치에 대해 검토함과 동시에 현행법 제도 하에서의 엄격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.
- ② 일조(日朝)정부간 협의를 비롯해 모든 기회를 포착하고 북조선(북한)측에 의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.
- ③ 납치피해자 및 북조선(북한) 정세에 관한 정보 수집·분석·관리를 강화한다.
- ④ 납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에 관한 수사·조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납치 실행범에 관한 국제 수사를 포함한 수사 등을 계속한다.
- ⑤ 납치문제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는 결의를 새롭게 하고 교육 현장을 포함한 일본 내 지역 각계각층 및 각종 국제회의 등 여러 곳을 활용하여 내외 여론의 계몽을 한층 강화한다.
- ⑥ 미국, 한국을 비롯한 관계 각국과의 긴밀한 연계 및 유엔을 비롯한 다국간 협의를 통해 국제적인 협조를 더욱 강화한다.
- ⑦ 납치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세밀한 배려와 꼼꼼한 대응, 기존 귀국 납치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추후의 납치피해자 귀국을 위한 준비에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.
- ⑧ 그 외 납치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.